

‘행정 통합’ 공식화...“6·3 地選 통합단체장 선출”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공동 선언
“광주·전남 대부흥 새 역사 열어야”
“정부 전폭 지원 지금이 적기” 공감
‘통합추진협의회’ 구성...추진 속도전
시·도민 의견 수렴 거쳐 통합안 마련
李대통령, 9일 지역 정치권과 오찬
시·도지사, 국회의원 참석 결과 주목



“행정 통합 즉각 추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강 시장과 김 지사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행정 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매리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자”며 행정 통합 즉각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관련기사 3·7면

특히 양 시·도지사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행정 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실현 가능성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지난 2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합동 참배를 마친 뒤 민주묘문 앞에서 광주·전남을 하나로 묶는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납부권 반도제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자위와 조 직 특례를 부여하고 교부세 추가 배분과 공공기관 우선이전등과 관련한 특권(인센티브)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광주·전남이 행정 통합을 추진할 최적기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공동 선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즉각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시·도는 시·도 통합의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권한 이양과 특례 확보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 발전과 시·도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통합 추진의 모든 과정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과 맞춤형 특례를 담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국가 행정 권한과 재정 권한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실

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 시·도는 광주와 전남이 동수로 참여하는 가칭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양 시·도 부시장·부지사(정무)를 당연직으로 하는 4인의 공동대표를 두기로 했다.

또한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회의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합안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인 ‘5극 3축’으로 광주·전남 발전의 부흥의 기회를 주셨다고 본다. 특히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AI·반도체·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인재 양성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

고 있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며 “정부의 의지와 지역의 결단이 맞물린 지금이 행정 통합의 최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발표문에는 없지만 사실상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앞으로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며 “시·도민 의견을 모아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제1호 행정통합 모델로서 부강한 광주·전남의 시대를 화려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영록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통합 지방정부의 과감한 지원에 나서고 있고 정부가 과격적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광주·전남 대통합의 최적기”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조건이 갖춰질지

장담할 수 없으므로 광주·전남의 가장 큰 숙원인 행정 통합이 성공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김지사는 또 “어려운 길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이루고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단체장을 뽑아 7월 1일부터 광주·전남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가야 한다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 생각한다”며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의 2월 말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또한 실무적으로 일을 할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회 외에 폭넓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도민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일 청와대에서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광주·전남 정치권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진전된 행정 통합 논의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재성·변은진 기자

고병원성 AI 확산...나주·영암 초토화 우려

예년 대비 감염력 10배 이상 높아

1개월새 6건 발생...13만마리 살처분

나주, 닭·오리 사육 규모 전남 1위

영암도 상위권...道 “차단방역 총력”

감염력이 예년 대비 10배 이상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 가금류 사육 밀집지인 나주·영암지역에서 확산하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나주 반남면 소재 종오리 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종오리 8천여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은 농장주가 산란을 저하와 폐사 증가를 확인하고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전남에서는 올해 동절기 들어 총 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지난달 8일 영암 시종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19일 나주 봉황면 육용오리 농장, 29일 나주 동강면 종오리 농

장, 27일 영암 도포면 육용오리 농장, 29일 나주 봉황면 산란계 농장, 이달 3일 나주 반남면 종오리 농장까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 기준 고병원성 AI는 전국에서 총 30건 발생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H5N1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대해 감염력·병원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감염력이 예년 대비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영암·나주가 전남지역 가금류 사육 밀집지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전남 닭·오리 사육두수는 각각 2

천33만9천마리(339농가), 387만3천마리(220농가)로 전국 사육두수의 각각 12%, 62%를 차지한다.

특히 나주지역 닭·오리 사육 두수는 각각 542만8천마리(전남 전체 대비 23%), 오리 70만5천마리(18%)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영암 역시 오리 37만8천마리(10%), 닭 239만6천마리(10%)로 각각 도내 3·4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금류 사육 농장이 밀집돼 있다.

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남지역 닭·오리 살처분 규모는 현재까지 총 13만1천여마리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 방지와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과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장을 방문한 사람·차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나주·영암 방역지역

내 가금 농장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특별·점검 관리도 진행한다.

유타규 농축산식품국장은 “사람과 차량 출입 관리 등 차단방역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방역 조치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가금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인식하고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Today	
여야, ‘2차 종합·통일교특검’ 극한대치	4면
추억의 놀이 “‘경도’를 아시나요”	6면
사전으로 읽는 218개 ‘馬’ 이야기	15면

SAMSUNG

새로운 꿈을 펼치는 2026년

끊임없는 도전의 발걸음마다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꿈과 상상이 현실이 되는 2026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삼성에는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 동행하고 있습니다